

광주 군공항, 서산·예천 분산 검토… 충주는 예비지로 활용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 위해 2028년 중순까지 임시 이전 계획
조종사 양성·대비태세 저하 ‘과제’
한미 COB로 당국 간 협의 필요

국방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공군 기지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충남 서산과 경북 예천을 주요 후보로 보고 충북 충주 중원기지는 예비 대체지로 활용하는 구상이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활용하기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기지 기능을 임시 이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해 산업단지 조기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방부에 요청했다.

광주 군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운용한다. 제189·216비행교육대대는 T-



광주 군공항 이미지.

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고 제206전투비행대대는 TA-50 블랙2를 맡는다. 전투조종사 양성과 서남부권 영공 방어가 주요 임무다.

국방부는 예비비 협의를 서둘러 하반기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목표 시점까지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2028년 중순은 전체 기능 이전을 마무리하는 개념이라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기능 이전에 따른 조종사 양성과 대비태세 저하도 과제다. 국방부는 시뮬레이터 등 시설을 갖춰 교육 공백을 줄이고

비행 소티에도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추가인력과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시설은 임시로 구축한 뒤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기지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로 주한 미7공군이 주둔하고 있어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도 필요하다. 국방부는 미국 측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COB 기능 조정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2032년 광주 군공항을 무안 군공항으로 최종 이전할 방침이다. 2028년 중순 기능 분산이 이뤄지면 최소 4년간 임시 운영체제가 이어지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시설 공법이 잘 갖춰져 있어 사전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면 2032년 12월까지 최종 이전이 가능하다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metro

부산항, 자율주행 스마트 거점 전환

42개월간 자동화 기술 개발·적용
총 454억6000만원 재원 투입

부산시가 부산항 신항을 미래형 스마트 물류 거점으로 바꾸기 위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공모에서 사업 주관 체계와 참여기관을 확정하면서 항만 자동화와 지역 미래차 산업을 함께 키우는 기반도 마련됐다.

부산시는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사업 가운데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개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2개월 동안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무인 운송과 자동화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까지 추진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과 부산항만공사가 전체 사업을 이끌며 지역의 주요 기관과 부품·IT 기업도 참여한다. 투입 재원은

모두 454억6000만원으로 국비 200억원과 시비 150억원에 민간 재원 104억6000만원이 더해진다. 사업은 3개 세부 과제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진행한다.

핵심 과제는 항만 운영을 지능화하는 통합관제와 현장 실증이다. 여기에 메가와트(MW)급 자동충전 기술을 포함한 항만 맞춤형 자율주행 기술과 24시간 무인 운영을 목표로 하는 전동화 자율이동로봇(AMR) 핵심기술 개발이 병행된다.

부산시는 기술 확보가 실제 항만 운영의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이어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한 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해외 스마트항만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부산항의 첨단 도약과 지역 미래차 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중요한 발판”이라고 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기회발전특구 상한면적 확대 환영

도 300만평, 시 200만평으로 확대

경남도가 정부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 면적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도(道)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 면적은 기존 200만평에서 300만평으로 100만평(50%) 늘어나고, 시는 150만평에서 200만평으로 50만평(33%) 확대된다. 정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상한면적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경남은 고성·통영·창원·밀양·창녕·

하동 6개 지구, 660만㎡ 전량을 이미 특구로 지정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상한 면적을 다 채웠다. 전국 평균 지정률은 55.6%다.

도내 특구에는 현재 55개 기업이 7조 649억원 규모의 투자와 6632명의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특구 지정 여력이 100만평 늘어나면서 첨단 산업과 지역 전략 산업의 신규 투자 수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조선·항공·기계 등 제조기업의 투자 수요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재정경제부와의 ‘지역 현안 청취 회의’에서 비수도권 상한면적 확대를 건의했고 이후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요청해 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북도, 원전사고 대비 임시주거시설 추가

기존 56개소에서 96개소로 확대

경북도가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 임시주거시설을 기존 56개소에서 96개소로 확대했다. 울진군의 부족한 자체 수용능력을 보완하고 울진·영양·봉화 등 한울권역의 주민 대피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울진군은 원전사고 발생 시 대피 대상 약 3만3000명 가운데 군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1만3000명에 그쳐 경주 5개소와 포항 2개소의 구호시설까지 이용해야 했다. 이에 일부 주민은 경주와 포항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북도는 2025년 8월 한울권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계기로 영양군·봉화군과 협의해 임시주거시설을 추가 확보했다. 현재 지역별 시설은 경주 35개소, 봉화 20개소, 울진·영양 각 14개소,

포항 13개소 등 모두 96개소다.

방사능방재 임시주거시설은 방사능 누출 사고 때 주민들이 임시로 생활하는 구호소로, ‘재해구호법’과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원전시설 반경 30km 지역의 학교와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해당 시군은 매년 방사능방재훈련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해 실제 대피경로를 점검하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북도도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 상태와 비상시 즉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확대된 임시주거시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시설 관리와 방재훈련을 철저히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주시가 감포읍 나정리 일원에 조성할 해양레저관광거점 ‘용오름길’ 조감도.

경주시, 490억 규모 해양레저관광 조성

2028년 12월 준공 계획

경주시가 감포읍 나정리 일원에 총 490억원 규모의 해양레저관광거점을 조성한다.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10월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비 245억원, 도비 73억 5000만원, 시비 171억 5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사업대상지에는 해양레저지원센터와 사계절레저체험센터, 용오름길,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 나정수상레저체험장, 고리섬폴장, 민파식적공원이 들어선다.

해양레저 체험시설과 함께 문무대왕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해안 경관을 활용한 산책·휴식 공간도 조성한다.

경주시는 2023년 7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중앙투자심사와 사업계획 승인, 일반해양이용협의, 공유수면 잠·사용허가 등 절차를 진행했다. 다음달 시행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보문관광단지과 도심에 집중된 관광 영역을 동해안까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경북)=김준한 기자

지역 이모저모

경북문화관광공사

단체여행객 버스 임차비 지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30인 이상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2026년 하반기 ‘버스타고 경북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기관·단체·여행사가 모집한 30인 이상 단체여행객이다. 경북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하고 여행 기간 도내 숙박비·식비·입장료 등으로 3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출발 전 참가자 전원이 여행자보협에 가입해야 한다.

버스 임차비는 출발지역에 따라 경북·대구권 최대 60만원,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최대 80만원, 기타 지역 최대 7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경북=김진곤 기자

나주시

녹색배 ‘설원’ 신제품 육성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가 국내에서 육성한 녹색배 ‘설원’을 새로운 나주배 품종으로 육성한다. 품종의 다변화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남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나주배원예농협과 함께 국내 육성 품종인 녹색배 ‘설원’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나주시는 ‘설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과 재배 농가 교육, 품질 관리 등을 추진한다. /나주(전남광주)=양수영 기자

부산시

‘해누리길 달빛 걷기’ 행사

부산 해운대구가 해운대의 바다와 도심 야경을 함께 즐기는 야간 걷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해운대구는 오는 28일 오후 7시 ‘해누리길 달빛 걷기’를 열고 오는 11월까지 모두 8차례 주민 참여형 걷기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첫 행사는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인 해운대스퀘어에서 출발한다. 참가자들은 준비운동을 마친 뒤 트레킹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약 2시간 동안 해누리길을 걷는다.

이번 걷기에서는 1코스과 8코스가 운영된다. 코스별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전체 모집 규모는 120명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

세계 딸기 엑스포 포스터 공개



(재)논산세계딸기 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수현 충남도지사·백성현 논산시장, 이하 조직위)가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세계 딸기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엑스포 개막을 6개월여 앞두고 선보인 포스터에는 행사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담겼다. /논산(충남)=양대승 기자 zzica@